

국힘 비대위원장 한동훈...여권 대대적 정치개혁 기대

윤재욱 권한대행 "젊은세대와 중도층서 많은 기대"...공식 추천 26일 전국위 의결...비대위원 인선 거쳐 연내 비대위 공식 출범

국민의힘이 21일 비상대책위원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공식 지명했다. 이에 따라 한 지명자는 비대위원장 제의를 수락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윤재욱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현안 간담회를 열어 "그동안 의결을 종합해 오늘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 장관을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 장관에게 전체적인 비대위원장 인선과 관련된 당 입장을 전달했고, 한 장관이 공감하고 수락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간담회에 이어 화상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비대위원장 임명을 위한 전국위원회 소집 안건을 의결했다.

오는 26일 오전 전국위에서 비대면 ARS 투표를 통해 최종 의결되면 한 지명자는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취임한다. 이후 비대위원 인선을 거쳐 비대위가 연내 공식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의 한 비대위원장 지명은 지난 13일 김기현 대표가 '주유 회생'을 둘러싼 당 혁신위원의 갈등과 여권 지지율 확보 속에 사퇴를 선언한 지 8일 만이다.

윤 대표 권한대행은 "한 장관은 당 내외 인사 다수가 추천하는 인물로, 의견 수렴 과정에서 그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높았다"며 "가장 젊고 참신한 비대위원으로서 국민의힘과 대한민국 정치를 바꿔 갈 것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또 "한 장관은 차기 지도자 여론조사에서 당내 1위를 고수하고 있고 젊은 세대와 중도층에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며 "당원과 보수층의 총선 승리에 대한 절박함과 결속력을 이끌어내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표 권한대행은 한 지명자가 정치 경험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새로운 정치를 하는 데는 더 좋은 조건일 수도 있다"며 "법무장관으로서 이미 정무적 감각·역할에 대한 준비를 해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직적 당정 관계 지적과 관련해서도 "한 장관은 (윤 대통령과) 신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소통의 질이 훨씬 좋아지고, 진솔한 소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 과정에서 이른바 '윤심' (윤 대통령 의중)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선 "윤심이라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그런 말은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다만 한 비대위원장 지명 이후 이런 결정 사실을 대통령실과 공유했다고 윤 대표 권한대행은 설명했다.

윤 대표 권한대행은 향후 비대위원 인선과 관련, "청년층, 중도, 수도권 등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되는 분들 중심으로 진용을 갖추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비대위원장이 생각하는 기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장으로 내정됐다는 이야기가 들렸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공식 부인했다.

윤 대표 권한대행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비대위원장이 공천위원장을 임명하게 돼 있는데, 공천위원장 내정이라는 가짜뉴스가 어떻게 퍼졌는지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임명식을 마치고 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尹 "재개발·재건축 기준 '위험성' 서 '노후성' 으로 바꿔야"

"사업 절차도 원점에서 재검토"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재개발·재건축 착수기준을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장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의 착수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먼저 기존 주택에 대한 안전 진단부터 받고

이를 통해 그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옷지 못할 상황이 또 일어난다"고 짚었다.

이어 "서울 주택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됐고, 특히 저층 주거지의 경우는 35년 이상 된 주택이 절반에 가까워서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이 노후 주택을 편안하고 또 안전한 주택으로 확실하게 바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도 아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늘 제가 방문한 모아타운과 같이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은 국가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재정 지원과 이주비 용자를 확대해 국민의 거주 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고, 각종 규제를 합리화해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새집을 찾아서 도시 외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직장 가까운 도시 내에 집을 구해서 살 수 있도록 생활 환경 개선을 아울러 하겠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윤 대통령 지지율 33%...2주만에 1%p 상승

NBS...53% "총선 신당 반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간 소폭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33%, '잘못하고 있다'는 59%였다.

2주 전에 실시된 직전 조사 대비 긍정 평가는 1%포인트(p) 올랐고, 부정 평가는 1%p 내렸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0%, 더불어민주당 29%, 정의당 5%, '지지 정당 없음·모름·무응답' 33%였다. 2주 전 조사보다 국민의힘은 4%p, 민주당은 2%p 각각 하락했다. 정의당은 2%p 올랐다.

내년 4월 총선에서 '국정운영을 더 잘하도록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43%,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에 힘을 실

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45%로 집계됐다. 2주 전과 비교하면 정부·여당 지원론은 1%p 올랐고, 견제론은 2%p 내렸다.

'총선에서 신당이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가 40%, '그렇지 않다'는 53%로 조사됐다.

민주당 비주류 일각의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47%가 '그렇다', 42%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결혼·출산시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월세 세액공제 1000만원으로 확대

국회 본회의 예산부수법안 처리

결혼·출산 시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고,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1000만원까지 늘리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2024년도 예산안과 함께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세법예산안 부수 법안을 처리했다.

내년 1월부터 결혼과 출산 때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56명 중 찬성 160명, 반대 44명, 기권 52명으로 통과됐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지만, 개정안은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1억원 추가 비교세 증여 한도

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의 5000만원에 추가 한도 1억원을 합쳐 총 1억5000만원 증여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도록 규정할 것이다. 따라서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모두 증여받을 경우엔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대상이 된다. 자녀 출산 시에도 2년 이내에 양가에서 물려받은 재산을 합쳐 3억원까지 공제 혜택을 준다.

다만 결혼 공제와 출산 공제의 통합 공제 한도는 1억원이다. 결혼·출산을 모두 하더라도 중복 혜택 없이 양가 합쳐 최대 3억원까지만 증여세를 공제한다는 의미다.

국회 기획재정부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결혼 및 출산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라며 "혼인뿐만 아니라 혼인 가구 출산, 비혼인 가구 출산까지 지원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글로벌 교육

전남에서 시작합니다

기간 2024. 5. 29.(수)~6. 2.(일) | 장소 전남 여수엑스포해양공원

2024 대한민국 글로벌 미래교육박람회

KOREA GLOCAL EDUCATION FAIR 2024 (GLOCAL EDU FAIR 2024)